다산포럼

정약용이 꿈꾼 나라

김 태 희
다산연구소 소장

100년 전, 1917년 10월 러시아혁명은 세계에 큰 영향을 주었다. 나라를 잃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약소국의 뜻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나라의 꿈을 심어 주었다. 그러나 100년이 채 되지 않아 각국의 공산주의 정권은 민주화 요구에 직면하여 종식되었다. 인간과 제도에 대한 이상과 과신이 인간을 억압하는 경직된 제도를 만들어 내다니. 이제는 인류에게 경험적 지혜를 주는 역사적 유산으로 남았다.

200년 전, 1817년 유배지 강진의 다산초당에서 정약용은 '경세유표'를 일단락 지었다.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한 제도적 구상이다. 정약용은 자신의 이상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구현할 것인가 고민했다. 그런데 '경세유표'는 군주제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결코 혁명적인 책은 아니었다.

20년 전, 우리 사회는 외환 위기의 충격을 겪었다. IMF 처방에 따라 정상화를 조속히 이뤘지만, 이후 우리 사회의 모습은 달라졌다. 기업 차원의 효율성 추구는 국민경제 차원에서 실업과 비정규직의 양산으로 나타났다. 평생직장이란 것은 사라졌다. 개인은 무한경쟁에 내몰리고, 사회는 분야마다 양극화의 폐해가 심화되었다.

2017년이 곧 저물어가는 이즈음, 초고령사회·기술의 발전 등이 우리의 미래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우리뿐만 아니다. 세계적 차원에서도 삶의 불안감은 심화되고 있다. 과연 우리 사회는 이대로 가도 되는 건가. 이제까지의 방식이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문제가 점점 심화된다면, 뭔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른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것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마침 지난 금요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경세유표' 저술 200주년 국회 세미나가 있었다. 저술 200주년을 기념하면서, 다산초당에서 정약용이 꿈꾼 나라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는 자리였다.

정약용이 강진에 유배가기 전, 38세로 아직 관직에 있을 때인 1799년에 쓴 중요한 글이 '원목'과 '전론'이었다. 목민관이 민을 위해 있음을 선언한, 정치 분야의 핵심적 글이 '원목'이라면, '전론'은 목민관이 민을 잘살게 할 임무를 밝히고 '여전제'라는 토지 제도를 제시한, 경제 분야의 핵심적 글이다.

'전론'에서는 군주와 목민관의 임무를, 민의 자산(資産)을 골고루 마련해 다 함께 잘 살도록 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여기에서 '병활'(竝活)! 함께 산다는 이 단어가 주목된다. '여전제'에서 주목할 아이디어는 첫째 농사짓는 사람에게 공적인 농토를 제공한다는 점이고, 둘째 일한 만큼 얻을 수 있게 하는 점이다. 정약용은 여전제의 시행을 궁구하면서 사람이 이익을 좇는 자연스러운 욕구를 전제했다.

정약용이 '전론'의 주장은 후일의 주장과 다르다고 말했지만, 구체적 실현 방안이 달라졌지 기본 아이디어가 크게 바뀐 것은 아니라고 본다. '경세유표'에서는 상당한 분량을 전제(田制), 즉 토지제도에 관해 할애했다. 이는 요즘식으로 보면 일자리 마련을 위한 제도적 노력일 것이다.

'경세유표'에서 정약용은 선비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저마다 일하는 사회를 도모했다. 심지어 국왕조차도 부지런하고 치밀하게 일하는 사람이었다. 정약용은 사적인 이익을 위한 중간착취를 배제하고 효율적인 공적인 시스템을 만들고자 했는데, 이 시스템의 정점에 있는 국왕은 공적인 존재로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다. 국왕을 보좌하는 신료들도 당연했다. 정약용이 꿈꾼 나라는 모두 함께 일하고, 모두 함께 벌고, 모두 함께 살아가는 사회였다.

지금 우리 사회도 일자리가 화두다. 질 낮은 일자리도 문제지만 그마저도 없다. 일자리는 공동체 구성원이 터 잡을 삶의 자리다. (박원재, '일자리와 삶자리', 실학산책 2017.7.14. 참조) 일자리의 부족과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나 노동시간의 조정 등, 돈과 시간의 문제와 결부된 접근이 필요하다.

돈은 노동의 대가일 뿐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는 수단이요, 소비 수요를 낳는 거시경제의 주요 요소이다. 돈은 돌아야 한다. 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의 조화는 개인적 차원에 그치지 않는다. 거시적으로 일과 돈과 시간이 모두 조화롭고 균형을 이뤄야 우리 공동체의 건강성이 회복될 것이다. 개인적 차원의 최선이 반드시 공동선으로 귀착되지 않는다. 공동체 차원의 해법이 필요하다.

지난 국회 세미나는 성황리에 마쳤다. 많은 이야기가 나왔다. 강진에 정약용의 사상을 연구하고 공유하는 시설을 세우자는 주장도 나왔다. 정약용의 사상을 법고창신의 자세로, 열린 자세로 되새길 기회가 계속되길 기대한다. 나아가 공동체 의식의 회복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한 실천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NGO칼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 대한 단상

김 종 필
광주환경운동연합 팀장

우리 국민은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촛불의 힘으로 정권 교체를 이뤘다. 희망의 불꽃 속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 선거기간 동안 탈핵(핵발전소 퇴출)의 관심은 어느 대선과는 달랐다. 각 정당은 핵발전소의 안정성을 이야기하고 에너지 전환 정책을 약속했다. 심지어 홍준표 후보도 에너지 전환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말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기간에 '탈핵현안 정책협약', '100만 서명운동 협약', 각종 인터뷰와 공약 자료집 등을 통해 수차례 약속했고, 이에 따라 선거 당선 이후 탈핵의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높았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고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고리1호기' 폐로 행사에서 탈핵을 선언하고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한 공론화 계획을 발표한다. 이후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고 '공론조사 방식' 확정과 2만 명에 대한 여론조사, 471명 시민대표참여단 종합 토론회가 진행됐다. 그리고 종합 토론회 이후 공론조사 결과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로 결정이 났다.

공론화에 대한 국민의 평가도 호의적인 분위기다. 특히 시민참여단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선택했지만, 핵발전소의 안정성, 핵 발전 축소 의견도 제시했다. 이를 계기로 많은 의제와 쟁점에서 공론화의 도입이 예상됐다. 그동안 많은 중요한 정책들이 밀실에서 소수의 몇몇에 의해 공익에 반하는 결정된 일들이 많았기에 숙의를 통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공론화에 대해 기대는 높다.

하지만 필자는 숙의 민주주의 실험과 정치적 책임 회피의 경계 위에 놓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발견했고 미숙한 공론화를 경계하는 필요성을 느꼈다.

숙의 민주주의를 표방하기에 이번 공론화의 3개월의 시간과 진행 과정은 많이 부족했다.

3개월 중 실제로 시민참여단이 문제를 파악하고 학습한 시간은 한 달이 채 되지 않으며, 1차례에 걸친 2박3일의 종합 토론회가 전부이다. 심지어 10월 15일까지 운영한 471명의 시민참여단 가운데 활동 종료 시점 이틀 전인 10월 13일 조사에서 신고리 5·6호기가 어디에 들어서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57.6%에 불과했다. 불충분한 숙의 기간은 공론화 과정의 합리성, 투명성, 민주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다음은 공론화 의제의 적정성 문제이다. 국민 의사를 골고루 묻는 전국적인 공론화라면 '신고리 5·6호기'가 아닌 '탈핵 공론화'여야 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전국민의 의사보다 지역의 여론을 보다 정확하고 비중 있게 반영해야 했다. 특히 핵발전소가 미치는 영향권(30㎞)에 있는 부산, 경주, 울산의 380만 지역민의 의사 반영이 중요하다. 이번 공론화의 시민참여단의 구성을 보면 인구 비례에 따르고 실제 참여 의사를 가진 이들을 선정하다 보니 울산의 시민참여단은 1.4%(7명)에 불과했다. 비슷한 규모의 대전(3.6%, 18명)이나 광주(3.4%, 17명)에 비교해 큰 차이가 났다. 이는 영광의 핵발전소 추가 건설 여부를 지역민에게 묻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문재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공약 이행의 로드맵 대신 공론화를 발표했다. 공약 파기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힌 것이 맞다.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5·6호기를 백지화' 하고 탈핵을 공론화해야 했다.

공론화는 대의제 등을 통해 위임받은 의회나 행정부가 의사 결정을 하는 것과는 근원적으로 다른 구조이다. 직접 민주주의의 의미를 더 살리기 위해서라면 국민투표 혹은 주민투표 등을 통해 전체 국민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지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그 역시 아니었다. 이번 경우 그 의미는 지나치게 확대됐고, 정치적 책임 회피의 수단이 됐다.

공론화는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재개됐다 해서 위험성이 해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시민참여단도 제기하고 있는 다수 호기 안전성 평가, 활성단층을 포함한 최대 지진 평가를 통한 신고리 5,6호기 안전성 강화가 조처돼야 한다.

우리 지역도 공론화에 자유로울 수 없다. 영광의 핵발전소의 수명과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용량 포화상태가 멀지 않기 때문이다. 영광 핵발전소의 이물질 유입과 격납고 철판 부식, 콘크리트 구멍의 원인은 추정만 할 뿐 정확한 원인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지역의 핵의제들이 쫓기듯 공론화를 표방하여 진행되면 안 될 것이다.

정부는 항상 어떤 사회 쟁점이든 명확한 입장과 합리적 근거 가지고 이를 밝혀야 한다. 정부는 저울질하는 심판이 돼서는 안 된다. 만약 국민들의 의견과 합의가 필요하다면 그에 걸맞는 의제와 충분한 시간, 정확한 정보, 투명한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촛불 정부의 모습이고 숙의 민주주의 과정이다.

기 고

위대한 민주화 발원지 금남로공원

이 병 열
4·19민주혁명기념사업회장

대한민국 민주화의 시원이요 초석을 놓은 1960년 4·19혁명과 3·15의거, 1980년 5·18광주민중항쟁, 1987년 6월 항쟁, 2016년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광주 시민은 금남로를 거점으로 항상 선봉에서 주도했다.

민주화 투쟁 거점이자 격전지였던 금남로에는 불의에 항거한 광주 민중의 한과 피와 넋이 스며 있다. 질곡의 역사가 각인된 금남로가 전국 국민에게 알려지면서 "금남로가 어디냐?"고 묻고 찾는 외지인들이 많아 관광명소가 되어가고 있다.

특히 광주학생독립운동과 광주4·19민주혁명, 5·18광주민중항쟁의 역사는 불의에 항거한 광주 3대 민중항쟁으로 다른 시·도와 차별화되는 광주만의 역사다. 광주의 정체성과 광주정신의 산실이요 뿌리이기도 하다.

하지만 3대 민중항쟁 역사 중 4·19 역사만이 소외되어 왔다. 군사 정권에 의해 30여 년간 망각의 역사로 묻혀왔던 배경이 있지만 보다 큰 원인은 관계 기관의 무관심에 있다. 1992년 문민정부 탄생으로 4·19는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룩한 역사로 헌법 전문에 3·1독립운동과 더불어 명기되어 국가의 기본인 헌법 정신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광주 4·19 역사는 위상에 걸맞지 않게 시민의 무관심과 관계 기관의 향토역사 관리 소홀로 광주공원에 추모비 하나 있을 뿐 기념탑조차 없이 방치되고 있다. 1960년 3·15의거는 4·19혁명의 도화선이 됐다. 광주 3·15의거는 마산3·15의거보다 3시간 앞서 일어났으나 역사의 기록은 마산만을 기록하고 있다. 이 역시 향토역사 관리 소홀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한민국 민주화 성지인 금남로의 금남로공원에는 '4·19혁명 진원지'라는 표지석이 있다. 4·19기념사업회는 민주성지 광주의 위상 정립을 위해 광주금남로공원의 명칭을 금남로4·19공원으로 변경해줄 것을 2010년부터 광주시와 동구에 13회에 걸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동구는 지난 5월 금남로공원을 '금남로4·19공원'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추진하기 위해 광주 16개 사회단체에 타당성을 물은 결과 12개 단체가 찬성 했다. 이후 행정 절차에 따라 지난 8월 30일 지명위원회를 진행하는데 '호남 4·19단체' 명의로 금남로공원을 '광주3·15공원'으로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지명위원회는 결과를 유보한 채 보류하고 있다.

호남4·19단체연합회는 지난 2011년 4월 4·19기념사업회와 4·19혁명동지회, 4·19문화원으로 구성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다. 본 조직의 4·19기념사업회와 4·19혁명동지회는 금남로공원의 명칭을 '금남로4·19공원'으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도 일부에서 '광주3·15공원'을 주장하면서 '호남4·19단체'명을 사용해 마치 호남 4·19단체 전체가 3·15공원을 주장하는 것으로 오해되고 있다.

물론 호남 4·19단체 내 이견은 민주성지 광주를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의견 대립이다. 금남로공원은 3·15역사와 4·19역사를 아우루는 공원으로 조성되어야한다.

만물은 순리에 따라 이루어졌다. 의견 대립도 순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3·15의거는 4·19혁명 원인이요, 도화선의 역사다. 헌법 전문에 3·15의거가 기록되지 않고 4·19 민주 이념이 기록된 것은 역사의 순리를 중요시함을 알수 있다. 따라서 금남로공원의 명칭을 민주화의 발원지로 각인된 금남로 지명과 민주화의 시원인 4·19를 상징하는 '금남로4·19공원'으로 바꾸어 민주화의 상징 공원으로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광주3·15의거 역사를 바로 세우고 제대로 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금남로4·19공원에 3·15표지석을 건립하고 표지석 글에 1960년 광주3·15의거는 전국 최초로 알려진 마산보다 3시간 앞선 4·19혁명의 도화선이 됐음을 표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래야 금남로가 대한민국 민주화 발원지이자 투쟁 거점임을 알릴 수 있고

민주 성지 광주의 정체성과 광주정신도 드높일 수 있을 것이다.

社 說

하늘로 보내고 가슴에 묻고 그들은 떠났지만

3년6개월을 기다렸지만 끝내 유해를 찾지 못한 세월호 미수습자 5명의 장례 절차가 어제 오전 발인을 마지막으로 끝났다. 참사가 일어난 지 1천315일, 선체가 육지로 인양된 지 223일 만이다. 이로써 세월호 희생자 304명에 대한 장례식이 모두 마무리됐다.

단원고 2학년 학생 남현철·박영인 군, 양승진 교사, 권재근 씨·혁규 군 부자. 이들 5명이 마침내 하늘나라로 간 것이다. 단원고 희생자들의 유품은 유해 대신 한 줌의 재가 돼 평택 서호공원 추모관에, 권 씨 부자의 유품은 인천 가족공원추모관에 각각 안치됐다.

이에 앞서 지난주 미수습자 5명의 가족들은 목포신항을 떠났다. 이들 가족은 떠나기로 결정하면서 "비통하고 힘들지만 가족을 가슴에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해조차 찾지 못한 채 사랑하는 이를 가슴에 묻어야 하는 이들의 비통한 심정을 어찌 헤아릴 수 있을까. 그들은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세월을 절절한 그리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야만 할까.

그럼에도 그들이 목포신항을 떠나기로 결정하고 장례 절차를 마무리한 데는 다시는 세월호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바람이 담겨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한 점 의혹 없는 진실 규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염원을 담았을 것이다.

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은 미수습자를 포함한 세월호 희생자 가족의 요구를 하나로 모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은 지난해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뒤 기한(330일)을 채워 24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정치권은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반대해 온 자유한국당은 이번만큼은 법안 통과에 반드시 동참해야 할 것이다.

위험 노출 환경미화원 근로 여건 개선해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새벽에 일하던 환경미화원이 숨졌다. 모두 '새벽 근무'가 원인이었다. 출근 시간대 이전에 일을 마치기 위해 서두르던 쓰레기 수거차 운전자의 실수로 사고를 당하거나 어두운 도로에서 승용차에 치여 변을 당했다. 시민단체들은 환경미화원의 청소 구간이 너무 긴 데다 근무 시작이 시야가 어두운 시간대여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새벽 근무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16일 새벽 6시40분께 광주시 남구 한 도로에서 환경미화원 서 모(59)씨가 쓰레기 수거차 뒷바퀴에 치여 숨졌다. 서 씨가 차에 타고 있는 것으로 잘못 안 수거차 운전자가 차를 후진하려다 발생한 사고로 밝혀졌다. 지난해 12월15일 새벽에도 광주시 북구 운암고가 밑 도로에서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에 환경미화원이 치여 숨졌다.

광주 5개 구의 환경미화원들은 새벽 5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한다. 출근길 도로를 깨끗이 하고, 생활폐기물 처리장의 반입 시간(오후 2~3시)에 맞추기 위해서라고 한다. 또한 환경미화원 1인당 담당 거리(5개구 평균 4㎞)가 환경부 권장 적정거리 1.8㎞에 비해 2~3배 가량 긴 점도 새벽 근무가 불가피한 이유 중 하나이다. 더욱이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환경미화원들은 청소 차량에 매달려 작업하는 위험마저 감수하고 있다.

환경미화원의 새벽 근무는 다른 지역도 비슷하지만 경기도 의왕시의 경우는 오전 7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에 퇴근한다. 일본 도쿄도 환경미화원들의 새벽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자 10년 전에 오전 7시40분 출근·오후 4시25분 퇴근으로 근무 시간을 조정했다. 특히 일본은 사고 예방을 위해 수거차 전진과 후진 시 유도 작업자를 배치하고 있다고 한다. 광주시 5개 구는 환경미화원의 새벽 근무 시간 조정 등 근로 여건 개선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러빙 빈센트

얼마 전 일이다. 프랑스 파리 오르세 미술관에서 낯익은 작품과 마주했다. 빈센트 반 고흐(1853~1890)의 작품 '론강 위로 별이 빛나는 밤'(Starry night over the rhone)이다. 짙푸른 밤하늘에 북두칠성(큰곰자리)이 떠 있고, 노란 불빛이 잔잔한 강물 위로 반영되고 있다. 또 강변에는 두 척의 배가 정박해 있는데 그 앞으로 팔짱을 낀 부부가 걸어가고 있다.

푸른색과 노란색이 조화를 이뤄 보는 이에게 따뜻한 느낌을 안겨 주는 작품이다. 고흐가 35살이던 1888년 9월 어느 날 밤, 프랑스 남부 아를에서 촛불을 켜놓고 그렸다고 알려져 있다. 당시 고흐가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의 생각을 일부나마 읽어볼 수 있다.

"어둠 속에서는 정확한 색상을 분간하기가 쉽지 않아 파란 색을 녹색으로, 연자줏빛 파랑을 연자줏빛 분홍으로 착각할 수도 있지. 하지만 나처럼 해야만 희미하고 창백하고 희끄무레한 빛으로 밤을 그리는 관례에서 벗어나 촛불 하나만으로도 전달되는 더없이 풍성한 노랑과 오렌지색을 표현할 수 있단다."('빈센트 반 고흐-자화상과 편지' 중에서 1888년 9월 24일 편지)

최근 개봉된 영화 '러빙 빈센트'는 무척 경이롭다. 고흐의 작품을 CG(컴퓨터 그래픽)가 아닌 유화로 일일이 작업해 만든 애니메이션 작품이기 때문이다.

공동 연출자인 휴 웰치맨·도로타 코비엘라 부부는 고흐의 열성 팬이었다. 기획부터 완성까지 꼬박 10년 세월을 투자했다. 먼저 전 세계에서 지원한 화가 4000명 가운데 107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배우들의 연기를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고흐 특유의 짧은 붓질로 유화 작업을 했다. 2년간 손으로 그린 유화는 모두 6만2450 점. 영화를 보다 보면 우체부 조셉 롤랭과 탕기 영감, 가셰 박사 등 고흐 작품 속 인물은 물론 오르세 미술관에서 만났던 작품을 비롯한 '별이 빛나는 밤' 등 많은 걸작들이 살아 움직인다.

127년 전 고흐의 마지막 발자취를 좇아가는 유화 애니메이션을 꼭 한 번 보길 권한다. '불꽃의 화가'로 불리던 한 가난한 예술가의 삶이 새로운 창작의 샘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송기동 예향부장 song@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정치부 220-0632 사회부 220-0642 사회2부 220-0652 경제부 220-0663 〈FAX 222-4938〉 문화부 220-0661 문화미디어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사진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7-9500〉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